독자권익위원 칼럼

언제부터 그들은 왕이 되었나

이지안
독자권익위원
에이아이티브 대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인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니, 듣고 보기는커녕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뒤늦게 투표지가 전달되고 대기하고 있던 유권자들에게는 오후 6시가 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또다시 음모론이 제기됐고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로 몰려가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기도 했다.

그런데 사태를 파악할수록 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통보가 이른 오후부터 선관위에 전달됐는데도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선관위의 해명이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난 선거 투표율을 고려해 수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에 예산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도 정작 현장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셈이다. 국민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선관위와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와 종이상자 등에 투표지를 담아 이동시키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국민의 신뢰는 크게 땅에 떨어졌다.

그 후에는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선관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조처를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는 다수의 채용 절차 위반도 확인됐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기관이 정작 내부에서는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철 휴직자 증가도 논란이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적지 않은 선관위 직원들이 휴직 상태였으며 선관위 내부에서는 불요불급한 휴직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선거 업무가 진행되는 시기에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면 조직 운영의 적절성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투표용지 부족, 소쿠리 투표, 특혜 채용, 휴직 논란. 이 모든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본질은 똑같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는 결국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선관위를 향한 견제와 감시의 한계가 함께 지적된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제도적 성과이기도 하다. 과거 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던 경험을 반성하며 선거만큼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이 곧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권력도 견제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감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 사이에서는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선관위를 감시할 장치는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특혜 채용 논란 이후 국회에서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과 외부 감시 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독립성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요구였다.

국민은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독립성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독립성은 신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독립성은 국민적 신뢰가 아닌 불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여러 문제를 되돌아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관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한이 아니다. 국민이 다시 믿을 수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민주주의의 심판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심판일수록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 국민이 선관위를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도 결국 하나다.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왕관을 썼다고 착각할 것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고유가 시대, 민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강양신
광주 남구청 민생경제과장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로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유가는 단순히 주유비 상승에 그치지 않고 물류비,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가격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서민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구,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은 시민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거시적 통화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은 중앙 정부의 영역이지만,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는 기초 지자체다.

우리 남구는 이 같은 인식 아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교통·물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종사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총 294억7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해 남구 내 지급대상자 총 15만727명(국내 거주 전 국민의 소득하위 70% 기준)을 대상으로 전격 집행됐다.

지원 방식 또한 지역 내소비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체크카드(신청 비율 70.5%) 및 오프라인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신청 비율 24.5%)을 적극 검토·활용했다. 이는 단기적 생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형평성'과 '체감도'였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 50만원, 소득 하위 70% 15만원으로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청·접수를 위한 동별 전담 창구를 2~4개씩 신설·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유사·중복 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정보나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양육 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총 354명에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 행정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남구는 지난 3일 기준 지급대상자의 95.0%에 달하는 14만3239명에게 총 290억8100만원 지급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높은 지급율은 서민 경제 안정을 향한 남구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증명한 결과다.

고유가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대응 역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프로그램 등 중장기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

남구는 이번 피해지원금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안전망이다. 고유가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

앞으로도 남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다.

취재수첩

청년이 떠나는 도시, 인구정책보다 일자리가 먼저다

엄재용
경제부 기자

지난해 광주의 인구 유출이 또다시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남도 1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가장 많이 빠져나간 연령층은 20대 청년이었다.

인구 통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전체 인구가 아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들어오는가다.

광주는 지난해 1만3678명이 순유출됐다. 이 가운데 직업을 이유로 광주를 떠난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1만명 이상 많았다. 단순 계산으로도 광주 인구 감소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전남 역시 순유입으로 전환됐지만 청년층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대에서만 5000명 넘게 순유출됐다. 40·50·60대는 들어오는데 정작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은 떠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광주·전남은 수년째 청년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남아 있는 청년들마저 결혼과 출산, 주거 문제를 이유로 지역을 떠난다.

출산 장려금과 정착 지원금, 전입 장려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직업이라면 답 역시 일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많은 지원금을 준다 해도 원하는 직장이 없으면 청년은 떠난다.

실제 통계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광주의 전입·전출 사유 모두에서 주택과 가족, 직업이 상위를 차지했지만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크게 벌어진 항목은 직업이었다. 결국 청년들은 지역을 싫어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떠나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광주는 지난해 수도권과의 이동에서 6300명이 순유출됐고 전남도 1000명 넘게 순유출됐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 이동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 인재와 기업이 함께 빠져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구 문제는 출산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인구 감소는 결과다. 원인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지역 경제에 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인구정책의 출발점도, 해법도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사설

통합시장 당선인 인수위 활동. 기대되는 이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격인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가 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환기획위는 민 당선인의 핵심 정책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공식기구로 기획, 시민주권, 산업경제, 과학기술, 도시공간,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은승 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백승주 순천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무엇보다 대전환기획위가 '압도적인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민 당선인도 이날 출범식에서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라며 "성장이 있어야 통합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시민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통합특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팹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전력망 구축, AI·반도체·데이터센터 집적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의 20조원 지원 약속을 실행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담 특위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통합을 추진한 지역에는 매년 5조원,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인수위 차원에서 '20조원 특위'를 꾸려, 정부와 협의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어젠다를 포괄적인 통합시정 로드맵을 구축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이후 시민들이 행정통합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00일 시민체감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내달 20일까지 공약 실행계획 및 재정운영 방안, 국정과제 연계 및 국비확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특별시 제1기 시정비전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둔 대전환기획위가 그려나갈 청사진이 기대된다.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 경매도 쏟아지는데…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경매물량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경매 진행 건수는 크게 늘고 있지만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5월 지지경매 동향보고서'를 보면 이런 지역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1월 147건, 2월 77건, 3월 122건 수준이었던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 4월 181건에 이어 5월 178건으로 두 달 연속 2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81건, 5월 95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 280건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줄줄이 하락 추세다.

올들어 1월 81.40%, 2월 80.10%, 3월 80.40%, 4월 81.40% 등 80%대를 보였던 경매 낙찰가율은 5월 들어 처음으로 80% 아래인 79.9%로 하락했고 낙찰률도 4월 37.0%에서 5월에는 28.1%에 그쳤다.

전남 역시 경매 물량이 올들어 늘어나고 있다.

1월 176건, 2월 113건, 3월 188건, 4월 184건, 5월 190건 등 총 8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월 104건, 2월 161건, 3월 149건, 4월 96건, 5월 106건) 616건보다 30%가까이 증가했다.

낙찰가율은 대부분 80%대를 유지했지만 5월에는 총 진행 건수 190건 중 낙찰 건수가 37건에 그쳐 낙찰률이 19.5%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경매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의 임의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는 무관하다.

이런 현상의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와 무관치 않다.

아파트 미분양 적체 심화 등으로 매·전세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도 압력이 커져 임대사업자·건설사업자 보유 매물이 한꺼번에 경매로 유입돼 경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광주·전남은 심각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아파트는 물론 상가, 오피스 할 것 없이 거래가 실종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산업부	370-7010	총무국	370-7093
사회부	370-7030	사업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자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